

**행 정 법**

출제위원: 이 석 준 교수

문 1. 「행정기본법」의 다음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ㄴ. 「행정기본법」상 법령등에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이 포함된다.  
 ㄷ.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달리 감사원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역시 「행정기본법」에 법령으로 명시되었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X)    ㄴ(○)    ㄷ(X)    ㄹ(○)  
 ③ ㄱ(○)    ㄴ(X)    ㄷ(X)    ㄹ(X)  
 ④ ㄱ(X)    ㄴ(X)    ㄷ(○)    ㄹ(○)

문 2. 강학상 허가과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접도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② 허가의 갱신이 있은 후에도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으며, 인가는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다.  
 ④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룰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문 3.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③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문 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를 제시한 경우’란 처분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적법성 확보를 위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6.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시정 명령이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 ②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만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④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 7.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등원칙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②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일반응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 ④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문 8.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 ③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청문절차흡결을 이유로 행정심판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으로 별도의 제재대상이다.

문 9.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의 취소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ㄴ.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ㄷ.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이어야 한다.
- ㄹ.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 ㅁ.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ㄷ, ㄹ, ㅁ

문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 甲이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 乙이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단,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음)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②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 ③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甲이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乙은 甲의 공장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문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계획 중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물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익도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형량명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④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의하여 이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12. 행정법령의 적용기준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의함)

-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④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문 1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ㄴ. 과태료의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인 감치처분을 행할 수는 없다.
- ㄷ.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미납된 과태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없다.
- ② ㄴ
- ③ ㄷ, ㄹ
- ④ ㄴ, ㄹ

문 14.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가급적 공동조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원칙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문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 16.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 ③ 제재적 행정처분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문 1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오인으로 각하한 경우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50년만의 최대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도로 유실로 보행자가 익사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 ④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8.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 ③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위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문 19. 취소소송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②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20. 다음 사례에서 갑(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동작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0년 12월 24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동작구청장은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21년 2월 14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동작구청장은 이 재결취지에 따라 2021년 3월 14일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① 2020년 12월 24일로부터 90일
- ② 2021년 2월 10일로부터 90일
- ③ 2021년 2월 14일로부터 90일
- ④ 2021년 3월 14일로부터 90일